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특별시민을 두려워해야 할 전남광주특별시장

책과 비전 제시에 대한 높은 열망에도 대응 소이했다.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다. 되레 흠집내기 식 갑론을박, 네거티브 구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투표권을 갖는 광주 권리당원 11만2천여명, 전남 2만여명의 표심이 결정적인 만큼 조직력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또한 당원 분포에서 보듯 외전상 전남이 압도하는 듯한 모양새 속에 동·서부 권역 간 대결도 예상되고 있다. 본경선을 앞두고 정책배심원 토론회 등이 예정하고 있으나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결국 누가 적임자인지 체감할만한 정도로 미치지 못하면서 자질 검증이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정확한 표현이다.

민주당으로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인물만으로 여태 출마선에 서 있다. 진보당은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을 후보로 추대,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정말 달라야 한다.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역사적 전환인 때문이다. 초대 시장의 제1의 조건 또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우선해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남약도정), 동부권 가운데 주창사를 어디로 두는 것부터 3분할로 갈라진 민심을 원만히 수습해야 한다. 광주 솔림, 전남 소의 우려를 불식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대대약을 준비해야 하는 소명이 부여됐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도 내놓을 수 없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미래자동차 등 광주·전남 주력 산업 발전 구상 및 수도권과 경쟁

할 유망기업 유치, 단순한 행정 결함을 넘어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만만찮은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냉철한 사고와 논리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특별시민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비할 바는 못되나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경우도 마땅히 본보기 삼아야 할 내용인듯 해서 옮겨온다.

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제1호의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흥행에 전력하고 있다. 후보들도 첫 관문인 토론회를 무난하게 치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고 야권에서도 강력한 대항마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대로면 경쟁은 미약하고 또 다시 민주당 독점이다.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마저 강요당하게 된다. 벌써, 지방선거 투표율마저 최저치를 찍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다.

100년 미래가 달렸다. 특별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진짜 특별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의 공천 과정부터 두 눈 부릅떠 시민 생활을 윤곽하게 만들 광범기민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틀리지 않았다. 새 희망을 노래해야 할 봄은 아직도 저만치에 있어 보인다.

6·3지방선거가 본격화했다. 광주·전남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선이 곧 본선이다. 후보자들은 총망무진으로 유권자와 접점을 늘리며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는 등 이슈 선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 정치적 동행 등을 내세우며 '명심(明心)잡기'에도 한창이다. 하지만 경선 시작과 함께 깎빠지고 말았다. 충분한 능력 검증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무산을 문제 삼아 이기호 국회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 조별 토론회 직전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하차한 바 있다.

당초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나설 5명을 추리고자 했으나 단 1명만 탈락하게 됨으로써 예비경선은 의미가 축소됐다. 실제로 최근 이틀간 치러진 토론회 첫날 A조(이하 기호 순)는 김영록(1번) 지사, 강기정(2번) 시장, 주철현(4번)·민형배(6번) 국회의원이 참여한 반면, B조는 2명이 이탈해 정준호(3번)·신정훈(6번) 국회의원 만으로 진행됐다.

조별 토론회 자체도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지방 주도의 성장을 내걸고 새 출발하는 특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부족했다. 정

문화난장



김종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통합을 계기로 성평등 도시를 설계하자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사람 위주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여러가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광역행정 관련 확대, 재정 구조 재편, 정책 집행 체계 통합이다. 그런데 행정구조 재편과 재생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산업 기반 변화를 거론하는 통합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통합이 가져올나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분야만 봐도 그렇다. 전남과 광주는 농촌과 도시가 결합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돌봄 구조, 가족 형태가 크게 다르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성평등 정책 기반이 가장 약한 지역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단체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맞물려있다. 6월3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평등정책을 집행할 조직 부서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권한과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통합특별시의 성평등 지수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첫째, 실금 성평등 전남 조직을 배치해 정책조정 기능과 예산협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정책은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니라 노동, 복지, 돌봄, 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을 조정하는 정책영역이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와 기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전담인력은 개방형 임용직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성평등 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젠더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특별법안 총칙에 성평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전남광주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로 출발하려는 지금이 성평등 원칙을 법제화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2월4일 시도통합 관련 타운 홀 미팅에서 불거진 진도군수의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지도층의 낮은 성평등 의식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였다. 여전히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가부장제의 권위와 성 차별,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성평등 지수가 하위를 면치 못한다면 이런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을 꾸려야 하는 키우고 싶은 청년들이 과연 있겠는가. 성평등정책 뿐 아니라 인구정책, 인권정책이 다시 재편돼야 한다. 여성의 출산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통합시의 성평등 체계는 광주와 전남의 2개 시·군·구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도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재편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적 선택 과정이 돼야 한다. 통합을 계기로 인구 320만명의 전남광주특별시가 성평등한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에 가면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교통망이다. 사통팔달로 뚫린 지하철과 버스 연계망, 특히 새벽까지 다니는 시내버스는 놀랍다. 외곽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을 생동감있는 도시로 각인시킨다. 서울시의 새벽 시내버스 운행은 바르셀로나 대도시권(Barcelona Metropolitan Area)의 광역교통체계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바르셀로나는 36개 자치단체를 통합한 메트로폴리탄의 주도시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이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은 지역간의 역학적 균형을 살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교통망' 정책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슈퍼 블록' 정책으로 보행권 중심의 개발설계를, '페미니스트 시티' 정책으로 도시정책에 젠더 관점을, '마니페스타 15'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시민 참여를

독자투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학부모를 비롯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아두자.

첫째, 정지선과 규정 속도를 지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 주의를 산만하여 집중력이 성인보다 낮아 앞만 보고 뛰어나는

새학기 등하굣길 '스쿨존 안전' 어른들의 몫

경우가 많다. 둘째, 불법주정차를 하명 안된다. 가끔 주차 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미리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추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핀 다음 녹색등에 안전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이처럼 모든 운전자들이 학부모라는 마음

으로 스쿨 존 내에서 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새학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행복한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아울러 내 아이가 걷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스쿨존의 안전 만큼은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한참 못 미친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판매 사업주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형사 판결 등이 이뤄져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1-2023학년도에 각기 166건의 담합에 참여했으며 평균 6건 가까이 낙찰받았다. 담합이 시도된 200건 중 성공한 226건의 입찰 평균 계약액은 4천638만 9천633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학교 주관 구매제도 시행 이후 경쟁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다수에서 낙찰률이 예정가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차순위와 투찰 금액이 1-2천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많이 낮은 값이 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법 행위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광주에서 수사를 통해 입찰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 유사 정황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는 때문이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의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위법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러 자율화된 곳을 제하곤 대부분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이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및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계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매뉴얼을 개선했다면서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의혹이 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크'라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재료·인건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을 테지만 자기 들끼리 은밀한 짝짜미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명분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국정과제 국제·지방세 비율 7대3 상향의 정당성

이재명 정부는 국제·지방세 비율 7대3 수준 상향,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를 비롯한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 등 지방단체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자치재정권 확대의 실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약 27조원의 국제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5%p 이상하고 자치구 직접교부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한 단계 더 높은 주민 생활지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1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을 목표로 심도있게 논의한다.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숙한 자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착화된 중앙정부의 재정 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하는 때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수다. 지방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스스로 체력을 키워 자립하기 위해선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정부 TF 운영에 맞춰 국정과제의 본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제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자치재원 확대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충이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계를 드러냈다. 재정분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소득 중심의 지방기간제 보완, 교부세율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역의 힘'을 길러줘야 한다. 국제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 7.5대2.5에서 7대3으로 올리고 나아가 6대4로 조정해야 한다.

다카시 광장

텃빈 충만

신수경

휴대폰 깜빡세일에 마음 빠앗기다
고개 들어 마주한 신의 손가락
말갱게 욕심이 지워진다



산다는 건 실은 지우는 일이다

※시작노트

좁은 휴대폰 화면에 마음을 빠앗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오후, 푸른 허공을 향해 뻗은 가지와 꽃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버처럼 나를 깨우는 순간,
나를 채우던 물욕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다는 건 번뇌를 지우며 하늘을 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의 사익사외서사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